

보도시점 2026. 7. 14.(화) 13시 배포 2026. 7. 13.(월) 13시
엠바고 준수 요청 드립니다.

재외동포청, '동포역량지원관' 신설해 700만 동포 역량 본격적으로 키운다

- '재외동포협력센터' 통합해 분산된 지원 체계 하나로 합치고 효율성 높여
교육·취업·정착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동포사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7월 14일 「재외동포청 직제」 및 「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」을 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- 이번 조직 개편으로 산하기관인 '재외동포협력센터'를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하여, 분산된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,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을 긴밀히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.
 - 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, 동포들의 역량과 교류망(네트워크)을 키워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.
- 조직 개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급의 '동포역량지원관' 1관과 산하 3개 과(동포인재육성과, 차세대동포연수과, 동포유산보존과)가 신설된다.
 - 동포인재육성과는 기존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수행하던 일회성 초청 장학 사업에서 벗어나 국내 귀환동포의 교육부터 취업, 정착에 이르는 전(全)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. 관계기관과 각 단계를 연계·지원함으로써, 한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대한민국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.

- 차세대동포연수과는 차세대 동포 연수 인원을 2025년 약 2,000명에서 2029년 까지 연간 6,000명 규모로 확대한다. 우수 참가자는 인재 후보군(인재풀)로 관리하고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로 연결해, 지속가능한 한인 네트워크 주역으로 키워나간다.
- 동포유산보존과는 재외동포 이주·정착의 역사 등 동포 유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 체계를 구축하여 흩어져 있는 동포 사회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"이번 조직개편은 분산돼 있던 재외동포 역량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"이라며, "한류의 전파자이자 경제 영토의 확장자, 국제협력의 민간외교관으로서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가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고, 700만 전 세계 한인 네트워크의 역량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발전시켜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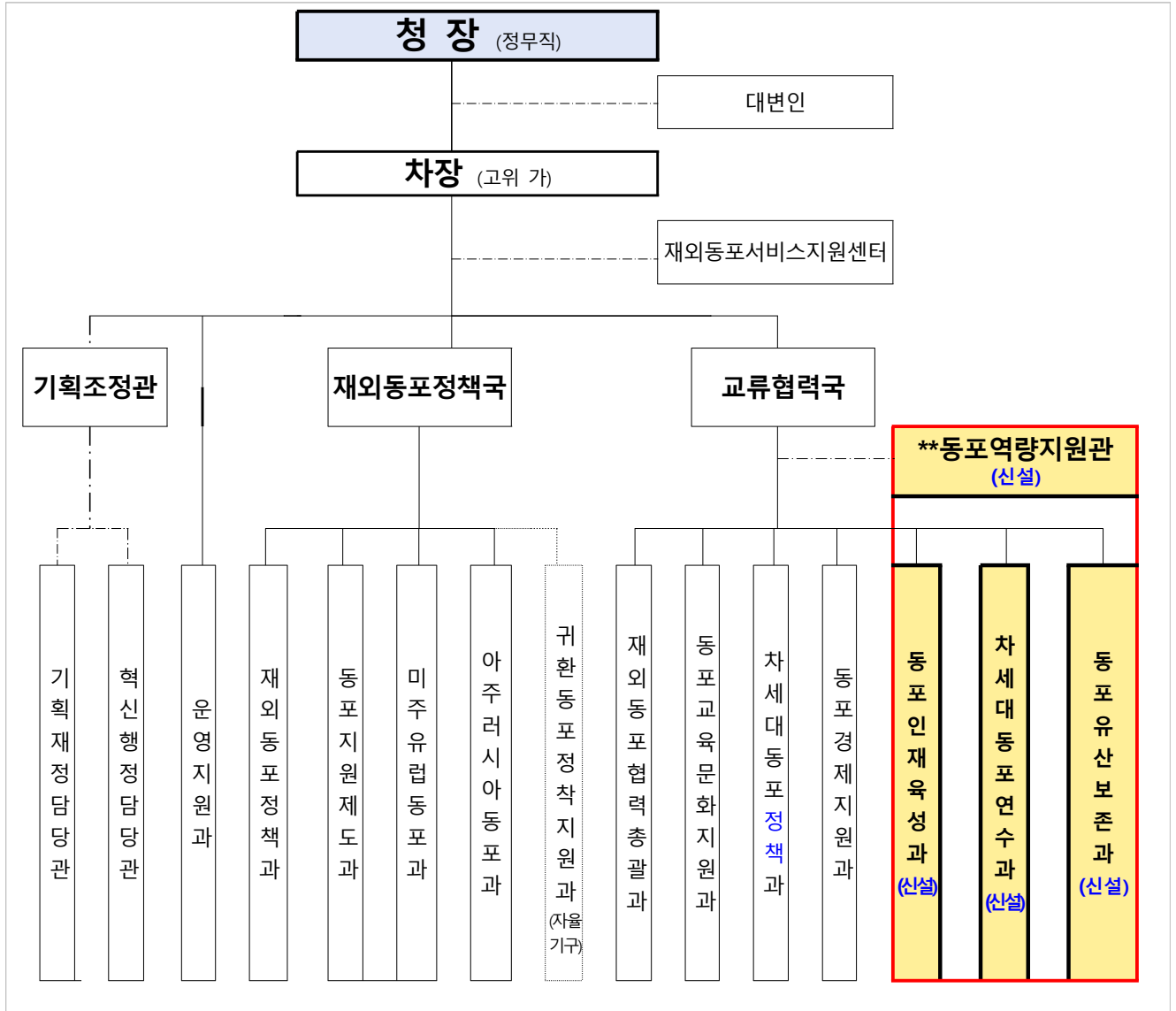
※ (붙임) 재외동포청 조직개편(안)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황유경 (032-585-3141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현 (032-585-3250)

참고

재외동포청 조직개편

□ 개편 기구도('26. 7. 14. 공포, '26. 10. 1.시행)



* (기구신설) 동포역량지원관, 동포인재육성과, 차세대동포연수과, 동포유산보존과

(기구 명칭변경) 차세대동포과 → 차세대동포정책과

** 재외동포협력센터기능 본청 이관(동 센터 폐지)